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6th

국정아젠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정한 사회" 정책 현황 및 과제

NEW 한나라

국회의원 권택기

[서울 광진갑 / 정무위원회]

목 차

들어가는 말

들어가는 말 ---------- 2

“공정한 사회” 정책 현황 및 과제

이명박 정부 국정아젠다 변천과정 ---------- 7
“공정한 사회” 국정아젠다 세부내용 ---------- 8
“공정한 사회” 관련 부처별 업무추진 현황 ---------- 10
부처별 공정사회 정책발굴 세부내용 ---------- 11
향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역할 및 정책방향 ---------- 16
(붙임) 환경부 공정사회 관련 정책현황 및 추진방향 ---------- 21
[정책제안] 공정한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 27

[부록1. 청와대 발표자료]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정운영방향 ---------- 33

[부록2 . 국회입법조사처 의뢰]

역대정부 국정아젠다 ---------- 49

… 들어가는 말 …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권택기입니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던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발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도 기회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세계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고, 올 11월에는 세계 경제 선도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어 전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을 찾게 됩니다. 변두리로만 여겨졌던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을 이끄는 중심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사회의 그늘진 곳 역시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하나씩 고쳐나가고, 국가와 사회가 힘을 모아 그늘진 곳에 밝은 빛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정'의 가치이자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며, 2010년 국정감사는 이런 차원에서 '공정사회와 민생안정' 이라는 주제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 더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10

국회의원 권 택 기

“공정한 사회” 정책 현황 및 과제

[국정아젠다 변천과정]

2008.2.25 취임사	
선진화의 원년	-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
2008.8.15 제63주년 8.15 경축사	
선진일류국가와 녹색성장	- 안전과 신뢰, 법치를 통해 선진국의 기초를 다질 것 - 저탄소 녹색성장에 총력 투자
2009.1.12 신년사	
위기를 기회로	-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 모든 경제주체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2009.8.15 제64주년 8.15 경축사	
친서민 중도실용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절실
2010.1.4 신년사	
더 큰 대한민국	- '일로영일(一勞永逸·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면 영원히 번영할 수 있다)'의 자세로 선진 일류 국가로 가는 초석 마련 -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어서 더 따뜻한 사회로
2010.8.15 제65주년 8.15 경축사	
공정한 사회	-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공정한 사회 구현 -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1. 2010.8.15 제65주년 경축사 中 “공정한 사회” 세부내용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 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합니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합니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 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 개혁,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학자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은
바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 실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친서민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발언

☑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한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 (2010.8.27 확대비서관회의)

☑ 공직자를 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달라. (2010.8.31 국무회의)

☑ 공직자부터 정치·사회·경제·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일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생각해 달라. (2010.9.5 장·차관 워크숍)

☑ 중소기업이 설자리를 잃고 중산층이 붕괴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확보해야 우리가 애써 일궈온 산업화와 민주화를 보다 성숙시킬 수 있다. (2010.9.8 중소기업대표 간담회)

… “공정한 사회” 관련 부처별 업무추진 현황 …

○ 본 의원실에서 15개 부 및 정무위원회 소속 주요 위원회를 대상으로 “공정한 사회”와 관련한 정책발굴 현황 및 회의 개최여부, 장관 발언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 관련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나, 부처장이 관련 지시 혹은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부처들이 존재하여 “공정한 사회” 국정 아젠다의 중요성을 다소 약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공정한 사회 관련 정책발굴 및 회의개최 현황]

	정책발굴	내부회의개최	부처장 발언
1.고용노동부	4개	2회	2회
2.교육과학기술부	5개	1회 이상	3회
3.국토해양부	2개	없음	1회
4.농림수산식품부	발굴중	3회	없음
5.문화체육관광부	발굴중	5회	수시
6.보건복지부	7개	없음	2회
7.여성가족부	6개	6회	4회
8.외교통상부	5개	수시	수시
9.지식경제부	2개	없음	없음
10.행정안전부	5개(분야)	2회 이상	수시
11.환경부	35개	2회	1회
12.공정거래위원회	4개	5회	4회
13.금융위원회	5개	2회	1회
14.국민권익위원회	3개(분야)	1회 이상	3회
15.국가보훈처	4개	3회	없음
**기획재정부	-	-	-
*법무부	-	-	-
*국방부	-	-	-
*통일부	-	-	-

*** 자료 미제출**

**** 기획재정부의 경우 “공정한 사회와 기획재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장관 발언 등을 포함 제출할 자료가 전혀 없음”을 구두로 답변**

… 부처별 공정사회 정책발굴 세부내용 …

	공정한 사회 관련 정책
고용노동부	**1. 임금체불 예방 및 신속대응체제 구축** **2.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 적용** **3. 청년고용대책 마련** **4. 고용·복지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1. 유아학비지원확대** - 2011년부터 만5세와 동일하게 **만3·4세 유아도** 소득하위 70%이하 전원에게 **지원단가 100%를 지급**할 예정 **2. 학생 평가의 공정성 강화** - 학생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연구윤리** - 국가차원의 표절예방시스템 체제 구축 등 **4.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강화** - 연구비 횡령 등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 마련 -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해 범부처적인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5. 재외 한국학교 교육여건 개선** - 재외한국학교의 교직원인건비 및 운영비를 50% 수준까지 국가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 등 -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국내와 같이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 -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국내학생 지원 수준인 16%까지 확대 추진

국토해양부	**1.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한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 조정**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 -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의 지속적 공급 -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케어형 주거동 건립
농림수산식품부	과제 발굴 중, 별도 목록화 아직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과제 발굴 중, 별도 목록화 아직 없음
보건복지부	□ **친서민 정책**은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서민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서민희망본부 출범과 동시에 7대 도전과제 발표 **1. 아이 양육 부담 경감 및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아동지원 확대** **2.「탈빈곤·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Package」 마련** **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4.「의료안전망」강화** **5. 국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 **6.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7. 나눔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	**1. 청소년한부모·조손가족지원** **2.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강화** **3. 북한이탈·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 **4. 성폭력 피해아동·여성의 2차 피해 해소** **5.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양성평등 제고** **6.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외교통상부	**1. 내부소통 개선을 통한 조직 운영의 공정·투명성 제고** **2. 대외 소통 능력 강화를 통한 정책의 신뢰성 제고** **3. 장애인 고용인원의 확대 추진** **4.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 **5. 소외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지식경제부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2. 광역 발전모델 추진**
행정안전부	**1. 공정하고 차별없는 정부인사 운영** - 공직 특별채용제도 개선 - 취약계층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 자치단체 인사관리의 공정성 강화 **2.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 - 공직윤리 강화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공직자 재산심사 등 - 내부고발공무원 보호제도 개선 -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자치단체 계약과정의 공개 **3. 따뜻한 자립·자활서비스 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4.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 서민거주지역의 안전환경 조성 **5. 나눔과 배려의 국민 공감대 확산** - 공직사회 내 분위기 확산 - 자치단체 등 동참분위기 확산 - 나눔과 봉사의 제도적 기반 강화
환경부	**붙임자료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1.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출발선에서의 기회균등 보장**

	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토대 마련** **3. 서민 밀접 분야의 법집행 강화** -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여 **민생안정을 도모** **4. 취약분야의 소비자 보호** - 상조·다단계·전자상거래 등 **소비자취약 분야**에서 **제도개선 및 법집행을 강화**
금융위원회	**1.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외자들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대상의 금융권 대출의 내실있는 운영 유도 **2.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의 신용회복지원 강화** - 신복위 등을 활용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패자부활 지원 **3. 중산서민층의 금융이용 부담 경감 도모**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로 인하,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서민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 유도 등 **4.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 구속성 예적금 판매(일명 꺾기) 근절, 불완전상품판매 억제 등 **5.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증시 불공정거래 감독 및 제재 강화, 우회상장 제도 등을 악용한 주가조작 예방 등
국민권익위원회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2.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관련 대책**

	3. 사회전반의 공정수준 제고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 8.15 이후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례** - 경기단체 및 국가대표 선발체계의 투명성 강화 방안(8월) - 전세자금 보증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8월) -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제 선정 및 지원금 부정수급 개선(9월)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부조리 개선(9월) - 문화예술진흥보조금 횡령 등 부패 개선(9월)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상,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2. 국가유공자 등 취업·교육 지원** **3. 보훈선양 활성화 기반 조성** **4. 의무 군복무자를 비롯한 제대군인 지원**
***기획재정부**	-
***법무부**	-
***국방부**	-
***통일부**	-

* 자료 미제출

… 향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역할 및 정책방향 …

	향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부처 역할 및 방향
고용노동부	-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존 과제 추진 점검 및 신규과제 추가 발굴, 추진 예정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 과학기술은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고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공정사회를 위한 시작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제반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국토해양부	-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양극화 해소**와 **국민 격차 완화**가 **중요** - 국토부는 **주거부문 격차 해소**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시**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8%에서 12%로 높여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 **서민계층과 사회 신입 세대**에게 **자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 -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확인**", "**하도급 계약금액 등의 적정성 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적극 유도**
농림수산식품부	- 대외개방 확대, 소득의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 상대적으로 거주 여건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 자율에 기초한 창조역량 강화 - 문화분야 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 사회적·문화적 약자에 대한 책임과 문화나눔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이의 실현을 위해 '공공성의 원칙', '효율적 행정운영' 등의 원칙 하에 그 간 추진해 온 문화정책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 및 추진해 나가면서 현장과의 소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 속에서 공정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보건복지부	- **친서민 정책**은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 (역할) 복지부는 서민정책 총괄을 담당 - (방향)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 재기를 위한 새로운 도전, 나눔과 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의 공유를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친서민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삼고, -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일선 집행기관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
여성가족부	- 공정한 경쟁에서 탈락할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조손가족, 북한이탈·중도입국 청소년 등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차별적인 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제고 추진
외교통상부	- **(부처 역할)** 외교통상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말보다는 실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임. - **(정책 방향)** 외교통상부는 현재 ▲조직 운영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지식경제부	- 부처역할 : 기업간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지역・계층간 격차를 완화하여 공정사회 건설에 기여 - 정책방향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추진

	②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③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도모하여 서민층의 부담 완화 ④ 사회적인 낭비요소 개선을 통한 서민생활 불편해소 지원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역할**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운영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 제고 -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선도 - **친서민·생활공감정책**을 발굴·추진하여 국민의 공감대 확산 - **자치단체 동참**을 이끌어 전국적인 윤리적·실천적 인프라로 확대 **□ 주요 정책방향** **1. 공정하고 차별없는 정부인사 운영** - 인사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기회균등 실현 **2.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 -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기반 마련 **3. 따뜻한 자립·자활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행정편의와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필요 **4.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 -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 및 안전시스템, 안전의식 강화 등 종합적 개선 필요 **5. 나눔과 배려의 국민 공감대 확산** - '공정사회'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로서 전 사회영역에 확고히 준수되도록 국민 인식 전환 필요

환경부	* 붙임자료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본연의 업무인 **시장경제 원리의 확산을 통한 공정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 공정한 사회의 **3대 지향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발굴할 계획 - **자율가치** 실현을 위해 **출발선에서의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과제 발굴 (예: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등) -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경쟁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 발굴 (예: 대·중소기업간 하도급·유통·가맹거래의 거래질서 공정화, 불공정 약관 시정 등) - **책임가치** 실현을 위해 **민생보호** 및 **민간자율 법준수 책임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예: 서민 밀접 분야 법집행 강화, 동반성장협약 등 연성규범 확대)
금융위원회	- (관행 개선) 금융소비자들이 빈번하게 받는 부당한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집중 감시·감독 - (제도 재정립)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권리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국민권익위원회	□ 기본 방향 -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는 진입규제가 있는 부분을 개혁하여 사회전반의 공정한 '게임의 룰' 정립 - 정책결정과정 등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제거 - 건전한 시장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 - 권력기관, 사회지도층,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일반시민, 민간부문으로 확산 □ 권익위 차원에서의 역할과 중점 추진과제 - 반칙이 없는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한 윤리

	적, 실천적 인프라 마련 - 청렴도 측정,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통한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 제고 대책 추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제정 등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유도 - 위원회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기능 등을 활용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발굴, 개선 - 위원회에 제기된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고충민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통해 시정하고, '규제형평법' 제정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방안 모색 - 이동신문고 운영 활성화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고충민원해결 시스템 강화 -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 마련
국가보훈처	- 공정사회 기반이 되는 국가정체성 확립 및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 - 국가를 위한 희생을 최고로 예우하는 "노블리주 오블리제" 정신을 전통적 가치로 내재화 - 국가유공자 결정의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민으로 존경받는 국가유공자상 정립 - 중상이자, 유족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 정책 추진
***기획재정부**	-
***법무부**	-
***국방부**	-
***통일부**	-

*** 자료 미제출**

(붙임) 환경부 공정사회 관련 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❶ 서민층의 생계비 부담 저감

과제명	주요내용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 연장	▪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경감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기간 연장**('08~) ▪ **일반수도사업자**(164개 지자체) **전체**가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참여**하도록 **유도**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03~)
저소득층 등 수도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 **'13년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 34,000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09~) 및 **수도분기관 연결 지원**('08~) ▪ **사업대상**을 **장기임대주택, 독거노인, 노인·아동복지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저소득층 병입 수돗물 무상공급	▪ 옥내급수관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중 희망가구**를 대상으로 **병입 수돗물 무상공급**('09~) ▪ 저소득층의 수도요금 부담 추가경감 및 양질의 식수공급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대상 저소득층**에 대한 **병입 수돗물 무상공급**('10~)

❷ 국민 환경보건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과제명	주요내용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 보호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태안**(유류오염), **영월**(시멘트공장 · 석회석광산), **장항**(제련소), **부산**(석면공장), **홍성·보령**(석면광산) 등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후속조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 일평균 650만명의 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평균오염도**를 '12년까지 **20% 저감**하고, 지하철 이용객·종사자의 **석면·라돈노출 근절**('08~)

과제명	주요내용
친환경 건강도우미, 그린코디 서비스	▪ **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아토피·천식과 같은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하는 서비스 제공('08~) ▪ **독거노인 거주주택**, **소규모 다중이용시설**(PC방, 고시원 등)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10~)
농어촌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전국 **농어촌**에 산재된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에 대한 **개량사업** 추진('10~'20, 30만 가구) -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처리 지원방안 연구('10) 이후 단계적 지원사업 추진('11~)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사업	▪ **동네놀이터** 및 교육시설 놀이터를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 **친환경놀이터모델 개발·보급** 등을 추진('08~)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 유아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서 중금속, 프탈레이트 유출로 인한 어린이 건강문제** 대두 -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실태 및 위해성 평가 강화 - 위해우려가 높은 어린이용품 근절 추진(관계부처 공동)
아토피·천식 어린이 치유캠프 운영	▪ **환경보건센터**(국·공립 및 민간 종합병원)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연계**하여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유캠프 운영**('09~) ▪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참가** 우선 기회 제공('10~)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정보제공 강화	▪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에 **영화관** 등을 **포함** 추진('10~)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10~) - **지하역사**와 같이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확대** - **영화관** 등 이용객이 많은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표출 전광판 설치 권고** 및 보급 추진
약수터 수질관리	▪ 미생물 살균기 설치 확대, 이용자 증가시기(해빙/하절기) 대비 주변 오염원 제거 강화 등 **약수터의 수질기**

과제명	주요내용
	준 초과율을 대폭 개선 - 약수터 수질기준 초과율(%) : 23.1('04) ⇒ 21.9('08) ⇒ 18.5('13)
건축자재 방출 유해물질 관리	▪ **폼알데하이드 등 새집증후군 유발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및 정보 표기** - 건축자재 오염물질방출량 표시제도 도입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구제제도 시행	▪ 취약계층·취약지역에 집중된 **환경성 석면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하여 환경정의 실현 ▪ **국가·지자체·산업계 공동**으로 **재원마련 및 건강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위조금 등 지급 - 석면질병 의심자 정기적 건강검진 등 지속적 관리
취약·민감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 어린이·산모·영유아·노인층 등 **취약·민감계층 대상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조사·연구** 실시 -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개발 및 보급·홍보

❸ 낙후·소외된 지역·계층에 대한 환경서비스 확대

과제명	주요내용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서비스 확대	▪ **농어촌지역 상하수도보급률**의 획기적인 **제고** - (상수도보급률) 45.2%('07) → 72.0%('13) - (하수도보급률) 45.7%('07) → 68.0%('13)
상수원 주변지역 등 주민지원사업	▪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사업** 추진('96~)

과제명	주요내용
익산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대책 추진	▪ 왕궁정착농원은 낡은 **축사·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축사에서 방류되는 **가축분뇨가 악취·수질오염 야기** ▪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15년까지 1,195억원 투입) 추진 - 환경부는 현업축사 매입(428억), 생태하천 복원사업(251억) 시행
국립공원 낙후지역 명품마을 조성	▪ 국립공원 구역 해위제한과 지리적 오지의 특성으로 **공원구역내 마을은 경제적으로 낙후** ▪ 공원구역 조정으로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마을지역을 대상**으로 **명품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제거 및 국립공원 이용가치 제고
환경부문 기후취약성 지도 제작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 빈번, 경제·사회·생태적 영향 심화로 **취약계층, 취약생태계의 피해가 커질 전망** ▪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를 **제작**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지역·계층의 영향 최소화

❹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과제명	주요내용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경기침체 및 유가상승 등 감안하여 **생계형 화물차**(3천cc 이하, 적재량 8백kg 이상)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09 50%, '10~ 25%)
영세상인 종량제봉투값 경감	▪ **재래시장, 시골장날**의 **영세상인 종량제봉투값 50% 경감**('08~)
중소기업 환경자금 지원	▪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역량 제고와 영세 환경산업체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환경개선자금**('84~), **환경산업육성자금**('09~)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94~) 융자지원

과제명	주요내용
중소사업장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오염우심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녹스버너 설치비**를 **70% 이내**에서 **지원**('06~)
악취취약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악취관리능력 제고**('06~)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 맞춤형 기술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학규제 정보제공,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 및 **저감기술** 등을 **지원**('08~) - 환경부·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서비스 확대('09.하~)
영세사업장 소음진단· 개선사업	▪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무료 소음도검사**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 '10년 시범사업 실시 후 '11년부터 매년 1,00개 사업장 지원
중소기업 폐기물부담금 경감	▪ **매출액 200억원 미만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13년**까지 **폐기물부담금**을 **50% 감면** - 전체 1,767개 업체 중 1,264개 업체(72%)의 폐기물부담금 약 100억원 감면 효과 예상

❺ 서민층에 더 가까이

과제명	주요내용
1사 1촌 운동	▪ 환경부 및 산하기관(4개)이 총 39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구축, 각종 지원활동을 추진('04~) - **환경부 실·국** 및 **소속·산하기관**(18개)이 합동으로 전국 **농어촌 마을 14개**와 **추가 자매결연** 구축('09.하)
불우시설 봉사활동 정례화	▪ 장·차관, 실·국장 및 소속·산하기관장의 주도하에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정례화('08~)

과제명	주요내용
소외계층 무료 생태관광 체험기회 제공	▪ 장애자,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생태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관광바우처제도 시행 - 바우처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생태관광 체험기회 제공
중고가구·가전 저소득층 무상지원	▪ 환경부, 지자체, 재활용센터 등을 연계한 중고가구·가전 저소득층 무상지원사업을 통해 나눔과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10~)
인테리어 회수 자재를 이용 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지원	▪ 주택, 상가 등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다량의 건축 폐자재가 발생되나 대부분 폐기 처리 ▪ **인테리어협회 등과 연계**하여 폐기되는 **인테리어 폐자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환경분야 서민대책 홍보강화	▪ **환경분야 서민대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 향상 및 **홍보활동 강화**

… [정책제안] 공정한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

○ “공정한 사회” 가 그간 발표된 그 어떤 국정기조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부족하며, 그만큼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

○ 그러나 “공정한 사회”라는 아젠다 자체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과 대상이 불분명하며, 각계 각층에서 생각하는 개념조차 백이면 백 모두 다른 것이 사실임.

- 실제로 지난 2010.8.19 한겨레21에서 각계 오피니언 리더 37명에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결과, 어떤 사람은 분배를, 어떤 사람은 공공선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출발선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경쟁할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가난한 자에게 더 분배하는 것이 정의다. 불평등의 구조화를 막을 공정성이 필요하다”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양극화 해소가 정의의 첫걸음이다. 양극화를 현실에선 기회 평등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 (정태인 경제평론가)

“정의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가치 체계이자 공공의 의사결정이다. 공공선을 찾고, 소유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재천 변호사)

“모두를 위해 동등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것이 정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 이 때문에 공정사회가 또 다른 국정 어젠다인 '친서민' 기조와 중첩되면서 공정한 사회가 친서민 기조와 합쳐져 포퓰리즘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임.

["친서민 정책 -공정한 사회" 에 대한 전문가 의견]

"공정의 가치가 이 정권이 처음 제시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나 '실용'의 가치와는 어떻게 접목되고**, '반부패, 특권없는 사회'를 표방했던 **이전 정권의 가치와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2010.9.14 이데일리 송길호 사설)

"공정한 사회를 추진한다면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앞장서서 연일 대기업을 때리기하는 것은 현 정부가 그토록 비난했던 **참여정부의 포퓰리즘을 답습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2010.7.28 아시아경제, 익명의 민간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공정성과 현장성이 돼야 한다. **진정 친서민·상생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공정성 장치와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하고, 그 내용은 관료들의 책상머리가 아니라 정책소비자의 구체적 삶에서 구해야 한다."
(2010.8.17 한국일보 이유식 논설위원)

"**친서민 정책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때, 친서민 정책 하나하나가 공정한 사회라는 관점에서 평가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2010.8.24 내일신문,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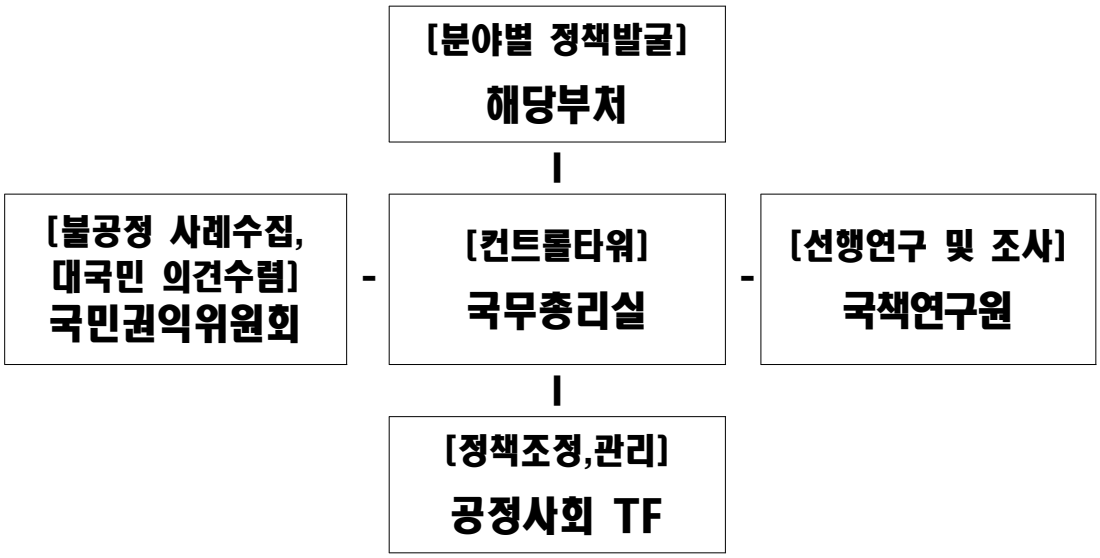
○ 때문에 “공정한 사회” 아젠다가 친서민 기조와 연결되어 성공적인 국정아젠다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바탕으로 한 개념 정립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나오는 것이 중요함.

○ 특히 **공정사회 아젠다는 사회 곳곳의 불공정 인식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협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그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임.

- 즉 **우리 사회에 이미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공정한 제도와 관례들에 대해 현장을 직접 파악**하고, 국민들이 그간 느껴온 **“불공정 사례” 전반에 대해 파악**하여 국민들이 정부의 ‘공정한 사회’ 구호가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것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공정한 사회’가 국정아젠다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아래 각 부처의 정책발굴, ‘공정사회 TF’ 구성을 통한 정책 조정 및 관리, 국민권익위원회의 불공정 사례수집 및 의견수렴, 국책연구원을 통한 정책 선행연구 및 조사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공정한 사회” 아젠다 성공을 위한 부처별 역할 수립 방안]



[부록 1. 청와대 발표자료]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정운영방향

목차

Ⅰ 이명박 정부 2년 6개월

Ⅱ 출범 이후 국정기조 흐름

Ⅲ "위기를 기회로" 2년 6개월

Ⅳ 이제 왜? "공정한 사회" 인가?

Ⅴ 공정한 사회를 위한 중점과제(예시)

Ⅵ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금융분야 과제 (예시)

Ⅶ 공정한 사회를 바탕으로 국정 UPGRADE

Ⅷ 이명박 정부 핵심 국정과제 완수

Ⅸ 대한민국 자화상

Ⅰ. 이명박 정부 2년 6개월

■ 이명박 정부 출범기 상황

-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10년의 그림자"
  - 양극화, 反시장, 反기업 정서 만연
  - 좌우충돌, 이념과잉, 표퓰리즘 심화
  - → "고용없는" 저성장(4%대) 고착
  - → 중산층 붕괴 가속화

	상류층	중산층	빈곤층
1996년	20.3%	68.5%	11.3%
2006년	23.6%	58.5%	17.9%

* 한국개발연구원(KDI)

- 공포 + 불신 + 불안 사회
  - 젊은층 : 구직난 (불안)
  - 장년층 : 구조조정 (불신)
  - 노년층 : 대책 없는 고령화 (공포)

Ⅱ. 출범 이후 국정기조 흐름

■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21C 출발"

* 이명박 대통령 재산기부 : 331.4억원 ('09.7월)

Ⅲ. "위기를 기회로" 2년 6개월

■ **글로벌(경제) 리더십**

- G20 워싱턴 정상회의
  "글로벌위기로 인한 보호주의 반대" 정상공동성명 견인 → G20 공동 의장국
- 한 · 중 · 일 정상회담 정착
- 한 · 아세안 관계 증진 : 신아시아 외교
- 한 · 미 관계 새 지평
- 한 · 인도, 한 · EU FTA

■ **OECD DAC 가입,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 **녹색성장**

- UAE 원전 수주
-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ME FIRST" 주창
- 녹색성장 청사진 마련
-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 지정

■ 경제위기 극복

- 한·중·일 통화스왑
-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 ('09.1.8 ~ 69차) → "국민경제대책회의" 전환
- 재정 조기 투입
- "TEXTBOOK RECOVERY"
  - · 13년 만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 · 7년 만의 최고 경제성장률 8.1 % (1분기)
  - · 소득 격차 97년 이후 첫 개선

→ 하위 20% 소득 17.7% ↑ 5분위 비율 개선 ('10.2/4분기 가계동향)

■ 위기극복 과정의 친서민 · 중도실용 정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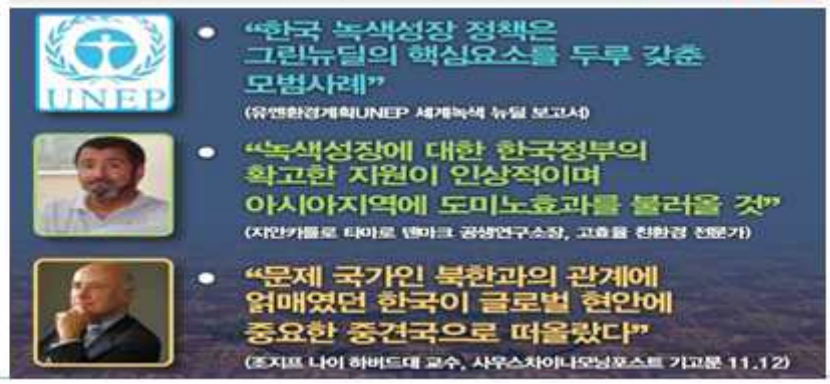
-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 보금자리주택
- 유가환급금 지원
- 가계 통신부담경감
- 위기가구 긴급 주거지원
-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 선도
- 희망근로
- SSM 개선방안 추진

■ 해외의 평가

경 제

- "South Korea seems to have pulled off a textbook recovery." (FT, '10.4.28)
- "Recovery Leader" (뉴스위크, '10.2.2)
-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응 결과,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 (IMF, '09.12월 평가)

녹색성장 · G20



Ⅳ. 이제 왜? "공정한 사회" 인가?

위기상황

- 위기공동체 정서
  * 대기업도 불안, 서민도 불안
- 사회불안 잠복
- 리더 중심 의존 · 결집

위기극복 이후

- 위기극복 수혜층 · 비수혜층 괴리
- 글로벌化 심화 : 글로벌 동조현상↑ 국내 동질성↓
- 베이비부머 세대 퇴장 시작

상대빈곤 차등정서

* '글로벌화 심화'

– 글로벌 동조 현상은 높아지는데 반해 국민적 동질성은 약해지는 세계적인 공통현상

: 주식, 부동산, 전문인력 등 글로벌 동조 심화

(ex) 서울, 도쿄, 상하이, 뉴욕 등 글로벌 도시들의 부동산(점유) 주식시장 등 동조현상
반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 "글로벌 차등정서" 심화

* '베이비부머 세대 퇴장'

– 6.25 전쟁이 끝난 직후 태어난 55년생 ~ 63년생, 70년대 중반 ~ 80년대 초 대학 학번 (712만명)

: 386세대에 대비되는 '껀 세대' – 실용적 보수세대
: 80 ~ 90년대 해외건설 · 조선 · 수출 등 주도한 개발시대 막내

– 그림자
: 2018년까지 712만명 중 311만명 은퇴 예상

➔ 한국사회의 중도실용층 위축

■ **위기극복의 "빛"**

► 리더십
– 이명박 대통령,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10인 선정 (美뉴스위크 '10.8.16)

► 국 가
– G20 의장국 : 세계 질서의 수용자 → 규정자

► (수출)재기업
– 세계 최강의 경쟁력
– 삼성전자 사상 최대 영업이익 ('10.2분기)
– 현대차 '빅3 미래 비전'

VS

위기극복의 "그림자"

✓ 중소기업
✓ 내수자영업
✓ 청년실업자
✓ 글로벌化 심화의 부작용
✓ 베이비부머 세대 퇴장

■ **경기회복 초기 정서**

– 일자리 창출 기대감 팽배 → 조바심, 불안 ↑
– 물가상승 압력 ↑
– 출구전략 시동

→ 서민 가계 압박 → 서민체감 "여전히 냉골"

■ **위기극복 이후 사회분위기**

– 국가장래 · 기대 → 경제 기대감, 지도자 신뢰 ↑
– 개인장래 · 불안 → 미래준비 불안, 경쟁탈락 불안

" 새로운 변화 갈망 "

(참 고) "새로운 변화 갈망" --- 세계 공통 현상

파울 놀테 교수의 진단 - 독일의 상황 -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 저자)

✓ "새로운 변화 - 책임과 자기투자"

"자본주의가 글로벌화하고 경쟁이 가혹해 진다고 해서
자유시장경제에서 탈주를 꿈꿔서는 안된다.
이 체제가 생산적이며 새로운 복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변화가 필요하다"

"왜, 변화가 필요한가?
세계화와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호소력과 제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고령화 고실업 등으로 국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오히려 커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재정 등 국가의 역량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 · 시민사회 · 개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자기투자 사회'로 가야 한다"

8.15 "공정한 사회" 천명

" 그러나 저는 여전히
변화에 대한 갈증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 2010년 8.15 경축사 중에서)

"공정한 사회" 천명의 선견성(先見)

"대통령 리더십과 정부재정(국민세금) 투입으로 이룬
'경제위기 극복 성과' 가 "고루 확산" 돼야…" ➡ " 국민적 기대
선견적 부응 "

"공정한 사회" 황금률

출발과정 : 공평한 기회
결 과 : 스스로 책임

→ "건강한 경쟁"

→ 패자에게 '재기의 기회' 부여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 **자율 / 자유 / 창의**

- 규제개혁 지속 → 시장경제 창달
- 다양화 · 특성화 교육제도
  (ex) 교과 전용 교실, 입학사정관제,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 청년 창업 촉진 · 지원

■ **공 정**

-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
-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ex) 든든학자금, 마이스터교

(참고)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 교수의 진단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우사인 볼트와 동일선상 뛰는 것은 불공정"

"극단적 우열반도 평준화도 불공정"

· 우반 : 학생자율 확대
· 열반 : 교사 추가지원

모두에게 합당한 사회조건 추구 : "공정한 사회"

■ 책임

(상황진단) 경제위기극복 → 세계의 TEXTBOOK

상대 빈곤 정서 ↑ | 자유와 권리 ↑ | 책임의식 미흡

불만 불신 | 개인주의 만연

공동체 의식 약화

(공정한 사회 위한 "책임" 실천)

- 정 부 ····· 친서민 정책
- 기 업 ····· 상생경영
- 국민(중상류층) ····· 나눔 · 봉사

자율 + 공정 + 책임 → 구 현 → 국가, 시장, 가족 공동체 회복

이 슈 親비즈니스포기? "NO !!"

■ 왜, 이젠 기업 차례인가?

- 정부 주도 위기극복 "TEXTBOOK RECOVERY"

재정확대 및 조기집행
저금리, 고환율
노사관계 선진화
타임오프제
FTA확산
수출보험 확대

위기극복
→ 대기업 최대수혜
• 정부 재정확대 한계

→ "이젠 대기업 차례"
✔ 투자 → 일자리
✔ 상생경영

■ 3가지 인식

(1) "사회안전망" → 시장안전판 → 反기업 정서 차단벽

(2) 경제 성장과 기업의 역할 확신
- "기업투자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의 기초

(3) 공정한 사회의 "앞과 뒤"
- 기업 · 기업인 · 기업가 정신(창의·도전정신)에 대한 "존중"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경의"

Ⅴ. "공정한 사회" 를 위한 중점과제(예시)

(1)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

목표	" 개인의 창의(탈렌트)와 자율이 넘치는 나라 "
주요 정책	▶ 진입제한 개선 등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활력 복원 ▶ 대입자율화, 교원·학교행정기관 평가 내실화 등 교육개혁 ▶ 공공기관 선진화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자율·책임경영 착근 ▶ 타임오프제 등 노사 선진화 정착

Ⅴ. "공정한 사회" 를 위한 중점과제(예시)

(2) 더 공정한 사회

목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 " 패자부활전 "
주요 정책	▶ 든든학자금, 사교육비 절감 등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역점 ▶ 문화바우처 확대 등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교육기회 제공 ▶ 청년창업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육성, 직업훈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 온누리상품권 확대, SSM입점 규제 등 전통상권 부활

Ⅴ. "공정한 사회" 를 위한 중점과제(예시)

(3) 사회적 책임 구현

목표	"상생과 나눔 · 봉사 "
주요 정책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 보금자리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친서민 핵심정책 착근 ▶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의 확충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정착 ▶ 성실실패 기업인 연대보증채무 감면 등 재도전 기회 제공 ▶ 나눔문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Ⅵ.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금융분야 실천과제(예시)

[분야]	[과제]
더 자유롭고 더 창의적인 사회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 금융공기업 선진화 ▶ 금융규제개혁 촉진
더 공정한 사회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기업 금융지원 우대 ▶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 강화

Ⅵ.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금융분야 실천과제(예시)

[분야]	[과제]
사회적 책임 구현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및 재취업 지원 ▶ 미소금융 및 햇살론 활성화 ▶ 실패한 기업주의 재기지원 강화 ▶ 서민 금융이용 부담 경감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공정한 사회" 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주목 !"사회적 기업" "공정한 사회" 가장 실용적인 대안

- ✓ 민간부문 고용창출 저하
- ✓ 고령화 · 저출산 등으로 사회 서비스 수요 등 증가

"사회적 기업의 시장기반"

- ✓ 2012년 말까지 1000개 육성, 5만개 일자리 목표 * 2007년 54개 → 2010년 8월 353개 급증

경제 · 재정적 효과	정치 ·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총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60% 이상 •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증대 – 정부 지원금 대비 약 3배 영업매출 창출 • GDP 증가와 세수 확충 – 영국은 GDP 1% 차지	• 취약계층의 자아실현 등 사회통합 • 1사 1사회적기업 운동을 통한 사회공헌 – 국민의 착한 소비문화 확산 • 나눔 문화 확산

▪ 정부 촉진 정책 :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건비·전문지도인력 지원, 금융·세제 혜택

※ (참 고) 영국 – '사회적기업 육성 액션플랜(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수립
미국 – '사회적 투자펀드(Social Investment Fund Network)' 조성

(참고) 왜 상생경영이 기업이윤 창출에도 좋은가?

'상생경영' 미국 경영학계 흐름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 미, 밴틀리 대학 라젠드라 시소디아 교수

20세기 기업 (위대한 기업의 시대)	21세기 기업 (사랑받는 기업의 시대)
• 승자 독식, 무한 경쟁	• 파트너십, 네트워크 경영
• 고객, 투자자(주주) 이익 극대화	• 고객 투자자 외에 협력업체 → 지역사회 → 국가 → 지구촌에 유익한 경영
• GM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 (기업 지상주의)	• 이케아, 혼다, 사우스웨스트항공 코스트코, 존슨앤존슨 (기업 : 사회 생태계의 일부)
• 단기 수익 극대화 장기 생존 확률 저하	• 장기 생존 확률 (지속성장)↑ 장기 재무성과↑

Ⅶ. "공정한 사회" 바탕으로 국정 UPGRADE

BRAND & COLOR

- 말보다 실천, 계획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 역사가 기억할 핵심 과제에 전력투구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명박 정부 브랜드과제 완성

NO JINX

- 3無 실현 : 無 게이트, 無 매너리즘, 無 스캔들
- 초지일관[初志一貫] · 선우후락 [先憂後樂]
- 고위공직자 · 지도층 등 : 자기절제, 희생정신, 솔선수범 → '공정한 사회' 선도

SMART MANAGEMENT

- 목표 확신 + 효율적인 경영[관리] => 성취

국정운영의 SWOT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믿음과 국제적 호평 · 2년 6개월간 국정 경험과 교훈 · 경제위기 극복과 자신감, 국가 신인도 외환위기 이전 회복 · 국정운영 목표와 콘텐츠에 대한 공감대 [예: 녹색성장, 더 큰 대한민국]	· 높은 대외 의존도와 자원전쟁 우려 ·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한시 조치의 정상화와 줄구전략 리스크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친서민 · 중도실용 정책의 본격 시행 ·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가속화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상존 · 대북제재 등 한반도 정세 불안 · 불공정 인식 확산 · 4대강 반대 지속

Ⅶ. 이명박 정부 핵심 국정과제 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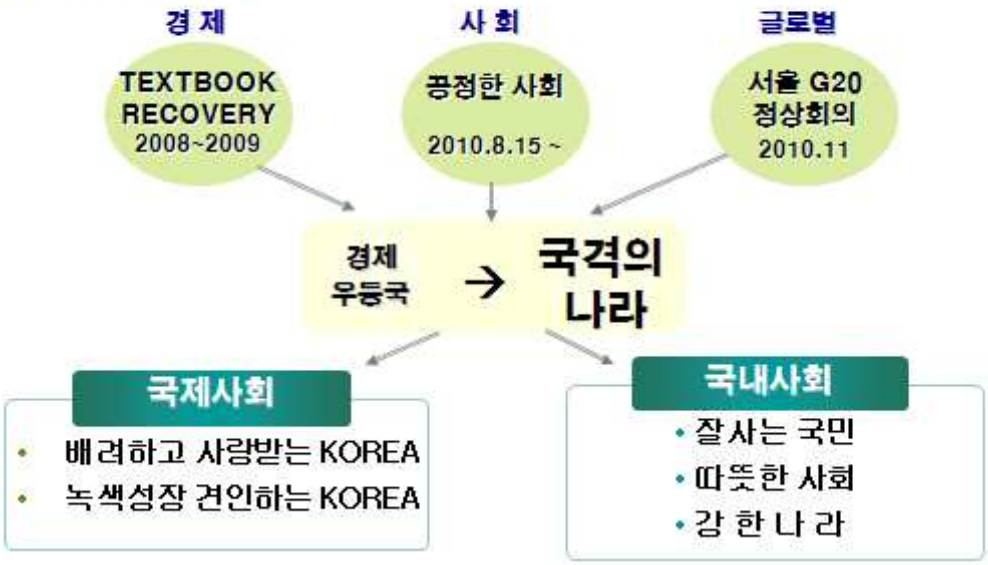
[분야]	[과제]
1. 성숙한 세계국가	후발국 원조 확대, 발전 경험 전수 및 인재 파견, 아프리카 대륙차원 경협 주진 등 "지역전략" 강화
2. 국가브랜드 제고	G-20 정상회의 성공(서울선언), 우주기술 자립화 등
3. 공공부문 선진화	공공기관 선진화, 출연연 개편, 공기업 경영평가 개선
4. 지역상생발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5+2 광역경제권 구축, 전국 고속철도망 주진
5. 미래인재 육성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마이스트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제도 정착

Ⅷ. 이명박 정부 핵심 국정과제 완수

[분야]	[과제]
6. 한반도 신평화 구축	그랜드 바겐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통일세 논의 심화
7. 안전한 사회 구현	법질서 확립, 국가 사이버 안전체계 강화 등
8. 정치 선진화	선거제도 등 개편, '권력의 정치' → '삶의 정치' 구현
9. 4대강 살리기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길 건설
10.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새만금 개발 등

Ⅸ. 대한민국 자화상

■ 국정 로드맵



[부록 2. 국회입법조사처 의뢰]

역대정부 국정아젠다

NARS
입법조사회답

권택기 의원 귀하

역대정부 국정 아젠다

국회입법조사처
www.nars.go.kr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이 정 진
Tel. 788-4533/Fax. 788-4539
E-mail: chaorum@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1. 이승만 정부

1)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이승만의 대표적 구호였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는 1950년대 민족주의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이 구호는 당시 상황을 전시로 규정, 분열을 죽음과 단결을 생존과 직결시킴으로써 생존을 위해서는 단결을 애국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임

○ 분단국가의 성립과 전쟁시기에 남북한 모두 민족주의를 자신의 담론내에 포섭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승만은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여 민족주의를 자신의 담론으로 만들었음

○ 즉, 이승만은 반공주의를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민족주의자임을 표방함

□ 이승만은 3·1운동 및 임시정부를 정부수립과 연결시킴으로써 이승만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였음

○ 일제하 가장 대표적인 민족주의 운동인 3·1운동으로부터 출현한 임시정부가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고, 남한의 단독정부는 이것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족적 정통성의 상속자라는 의미임

○ 이승만 정권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계승자인 대한민국만이 민족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논리로 친공적인 모든 노선을 반민족적인 것으로 비난하면서 반공을 내세움

□ 하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어젠다는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 대국민 구호의 성격이 강함

2) 북진통일

□ 이승만정부 시기 우리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은 반공과 북진통일론으로 압축될 수 있음

○ 이승만정부 초기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은 평화통일이었으나 이후 북진통일론으로 전환되었음

- 취임식에서 이승만대통령은 평화적 남북통일을 제안하였으며, 1948년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 이후 국회 폐회식에서 북한의 자유선거 실시를 주장하였음

○ 1949년 이후 아시아에서의 반공체제 구축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북진통일론을 개진함

□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은 1949년 2월에 처음 등장함

○ 1949년 이후 북벌, 북진통일의 형태로 나타나는 북진통일론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공식화되면서 이승만 시기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담론이 됨

○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발발 5일전인 1950년 6월 20일 "냉전으로 민주주의를 보전하지 못하면 열전으로라도 싸워서 승리해야할 것"이라는 예방전쟁의 논리를 피력함

○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통일을 위해서 전쟁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이 전쟁이 통일의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함

□ 북진통일론이 본격적으로 제창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에 임박해서임

○ 이승만 정권은 휴전회담이 재개된 직후인 4월 하순부터 유엔군의 통제에서 벗어나 남한 단독으로라도 북진하겠다고 공표하여 위기를 조성

○ 1951년 5월부터 한국전쟁 정전설이 나돌자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내세우며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식화

○ 1951년 6월 5일 국회는 '정전설 반대결의안'을 내놓음

○ 1951년 6월 10일부터 대한국민회 · 대한청년단 등 관제단체 주도하에 휴전반대군중시위가 시작

○ 휴전회담이 시작된 7월에는 부산, 서울, 김해, 울산 등지에서 휴전반대와 북진통일관련집회와 시위가 열림

○ 이승만 정권은 1953년 제43회 3 · 1절 기념식을 수만의 군중이 집결한 가운데 북진통일운동대회로 만들었음

□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로 이승만 정권이 휴전체제를 승인하고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양도함으로써 북진통일론이 현실적으로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계속 단독북진론을 포함한 무력북진통일론을 주장함

○ 한국전쟁 직후부터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전쟁 수행의 기본 목표로 삼았던 만큼 북진통일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임

○ 특히,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을 공식적으로 국가의 통일정책으로 선언함

□ 그러나 북진통일론은 현실적 가능성이나 실천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정치적 구호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의 남북협상론이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대응논리로 볼 수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통일공세에 대한 대안 제시의 측면이 강했음

○ 따라서 북진통일론은 대북관계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국내적 상황에 대한 대응논리로서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박정희 정부

1) 새마을운동

□ 박정희 대통령은 낙후된 경제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취임사에서 약속을 하였고 임기 동안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국정운영을 수행함

○ 경제성장과 배치되는 요소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등 경제성장위주의 정책결정을 하였고 근로조건개선, 복지정책요구, 환경문제 해결 등 당시에 요구되었던 사회문제들의 해결은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용

○ 낙후된 경제의 근대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을 시행, 이는 일종의 농촌계몽으로 확산됨

□ 농공(農工)균형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의 가속화 추진

○ 농공병진에 의하여 균형 있게 배양되는 국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직결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일터가 보장되는 탄력성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나갈 것임을 국정기조로 제시함

○ 이러한 국정기조로 시행된 정책이 '새마을운동'임

□ 민생문제 해결

○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여 그 동안 시달려 왔던 빈곤을 없애고 민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민 모두가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할 것임을 국정기조로 제시함

○ '새마을운동'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2) 한국적 민주주의 정착

□ 정치제도의 발전

○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실에 가장 알맞은 정치제도를 육성 발전시켜서 생산적인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치의 진실과 능률을 극대화해 나갈 것임을 국정기조로 제시함

○ 이를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아젠다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장기집권과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는 도구로 쓰였다는 비판을 받음

3. 전두환 정부

□ 전두환 정권은 4대 국가지표로 첫째 민주주의의 토착화, 둘째 복지사회의 건설, 셋째 정의사회의 구현, 넷째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제시함

□ 민주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정부패의 척결과 국민의식개혁 강조

○ 전두환 대통령은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을 규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는 한편 사회정화운동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임

○ 권력형 부정축재를 한 비위공직자를 선정하여 적법한 사법절차 없이 처벌을 내리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압적인 반부정부패 정책을 실시

□ 1980년 10월 28일 출범한 국무총리 직속의 '사회정화위원회'는 사회정화운동을 주도하며 국민의식개혁 운동과 함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을 함

□ 1981년 12월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 공직자선물신고제도,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 등을 규정한 최초의 공직윤리법을 제정함

4. 노태우 정부

1) 북방정책

□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7 선언을 통해 기존의 대북 및 대공산권 정책과 다른 북방정책을 표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전재성, 2002)

○ 남북한간 적극적 교류추진과 해외동포의 자유왕래를 위한 문화개방

○ 이산가족들의 생사 및 주소 확인과 서신 왕래 추진

○ 남북한간 교역에서의 문화개방

○ 남한측 우방과 북한간의 비군사적 물자교류 불반대

○ 남북한간 경쟁 및 대결외교의 종식과 상호협력

○ 남북한 쌍방이 상대 우방국들과의 관계대선에 협력함

□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소련, 중국, 동구,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안보, 경제이익, 남북통일 등과 관련된 정책임

○ 북방정책의 목표는 1)한반도의 평화정책과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2)소련, 중국 기타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외교영역 확대와 국제적 지지기반 확충, 3)우리의 경제적 진출과 자원 공급원 확보를 통한 국가이익 추구 등임(유석렬, 1989)

□ 단계별로 특정 공산권과의 수교, 소련 및 중국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 남북한 평화통일의 3단계를 추진하고자 함(전재성, 2002)

○ 1단계 성과는 7.7선언, 소련영사단 사무소 설치(1988), 헝가리 내 상주대표부 개설(1988), 폴란드 및 유고와 수교(1989),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시(1989) 등임

○ 2단계에서는 체코, 불가리아, 몽고, 루마니아 등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한소국교정상화를 이룩함(1990). 또한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1989년 남북고위급 회담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하였음

○ 3단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효시키고 이를 실천하기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함. 중국과도 1992년 수교 정상화를 이룸

- 그러나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와 북한의 입장 차이로 인해 1993년 이후 대북 외교는 경직되었음

□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이후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을 대화와 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또한 이 정책들은 미국의 정책이나 동북아 세력구조와 비교적 자율적으로 한국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

적인 노력이 돋보였음(전재성, 2002)

○ 반면 소련과의 수교시 성급하게 차관을 공여했다는 점, 중국과의 수교시 대만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 일부 비판도 존재함

5. 김영삼 정부

1) 신한국 창조

□ 김영삼 정부는 최초의 본격적인 문민정부임에도 지역주의 연합의 성격이 강한 3당 합당을 통해 집권했기 때문에 정권 정당화의 일환으로 신한국창조론을 제시했음

○ 신한국창조론은 기존의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정치문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임

□ 신한국 창조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부정부패 척결, 2) 경제 살리기, 3) 국가기강 확립이었음

○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하며 정치권에 대한 사정과 광범위한 정치, 사회적 개혁이 진행되었음

- 1994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3대 정치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가 제도화되었음

○ 경제 살리기는 '신경제정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금융실명제 등을 추진하였음

-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개혁 조치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것으로서 이후 부동산실명제, 공정경쟁강화 등으로 이어짐(장현규, 2004)

○ 기존의 친 재벌 정책과 달리 자유주의적 개혁과 더불어 재벌 개혁을 추진하였음

□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 정책이 노동계와 재계 모두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경제개혁은 후퇴하였으며, 집권 후반기에는 노사관계의 악화, 외환위기 초래 등 경제적으로 집권초기에 비해 악화되었음

○ 정경유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재벌 개혁의 경우 정치논리가 우선시되면서 당초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장현규, 2004)

○ 한보사태와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의 부패문제가 불거지면서 그간의 개혁

정책과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 등의 의미가 쇠퇴했음

2) 세계화

□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재임기간의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했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였음

○ 세계화는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의 갈등축이 이념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로 변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었음

○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국가가 경제발전을 추동했던 기존의 발전국가 모델에서 벗어나 시장중심적 국가로의 역할 변화를 꾀하였음

○ 한국은 1994년 WTO에 가입했으며, 1995년 OECD에 가입하였음

□ 세계화는 탈냉전 시기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준비되지 못한 개방정책의 결과 IMF 외환위기 사태를 초래하였음

○ 국내의 제도 정비와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자유화와 탈규제를 포함하는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이명수, 2007)

○ 이는 결과적으로 외화 부족과 IMF 구제금융 요청이라는 결과를 초래함

3) 역사 바로 세우기

□ '역사 바로 세우기'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과거사 청산을 통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기존 정부와의 관계 단절을 통해 문민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작업이었음

○ 6.27 지방선거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폭로사건을 계기로 노태우와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구속으로 이어짐

○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비자금 수뢰 등의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음

6. 김대중 정부

1) 남북화해와 햇볕정책

□ 남북한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기존의 정부

와는 구별되는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추진하였음

○ 취임사에서 대북 3원칙으로 '북한의 무력통일 불허',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거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추진'을 표방하였음

□ 햇볕정책은 안보와 대화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평화정착과 통일을 모색하려는 것임

○ 성급하게 통일을 추진하기보다 안보를 강화하면서 대북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함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고, 일방적 흡수통일 정책을 배제하며, 남북간 화해·협력을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음

○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일행의 북한 방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음

□ 6.16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개선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관계정상화, 교류협력 활성화, 대북 경수로 사업 추진,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등이 이루어졌음

○ 정상회담 이후 장관급 회담이 일곱 차례 개최되고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출범,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등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음

○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금강산 관광 등 인적 교류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음

○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등 정부와 민간이 주최가 되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했으며, 이산가족 및 납북자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

□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등 갈등의 여지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대북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과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지지하는 입장의 국민들간에 대립과 반목이 이어졌으며, 이는 기존의 남북갈등과 대비되는 남남갈등으로 규정됨

2) 생산적 복지

□ 모든 국민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구체적으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함

○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과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마련함

○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대책을 마련함

□ 1999년 신년사에서 '생산적 복지'를 제안했으며, 8.15 경축사를 통해 적극적 추진을 선언하였음

○ 실업이나 빈부격차와 같이 구조 개혁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생산적 복지 아젠다는 사회복지의 기반이 취약했던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필요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음

○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장기적으로는 빈곤탈출과 자활을 돕는 복지국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음

□ 그러나 출범 당시 IMF 위기 극복이라는 선결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던 김대중 정부의 한계로 인해 복지 아젠다는 사실상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음

○ 복지혜택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움

3) 정치개혁

□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선언하고 이러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당, 선거, 의회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음

○ 지역주의적 정치구도의 개혁,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와 선거풍토 개선,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의 투명화, 국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논의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운영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함(국정홍보처, 2002)

□ 1998년 국회에 '정치구조 개혁입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정당별로 당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 정당, 선거와 관련된 개혁입법을 추진하였음

○ 2000년 2월 선거법·정당법·국회법·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음

○ 이후 16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비점의 보완 등을 모색하였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음

□ 김대중 정부는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과 기대가 컸으나 공동여당의 정책적 차별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책 공조가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정치개혁 입법에 한계를 보였음

7. 노무현 정부

□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3대 국정 아젠다로 제시했음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지향함

○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잔존해있던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 부정부패의 유착구조, 지역간 분열구도 등을 청산하고 해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확산을 추구하였음(국정홍보처, 2008)

□ 과거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만연하였던 특권을 없애고 국민이 각종 정치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를 전환함

○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권력기관 중립화, 부패정치 청산,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완성하고자 하였음

□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특권구조의 청산 등은 일정정도 성취되었으나 대화와 타협의 문화 및 국민통합은 과제로 남아있음

○ 당정 분리, 책임총리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음

○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이는 과거 권력의 시녀였던 이들 기관이 자율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및 부패 방지 노력이 일정정도 성취를 거두었음

-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투명성 지수는 2002년 4.3점, 2004년 4.5점, 2006년 5.1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 참여정부시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확대되어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유화 정도는 1등급으로 평가되었음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 불균형 성장에 기반했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기존의 집중적, 집권적 사회를 분산·분권 사회로 전환하고자 함

○ 중앙·지방간 협력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불균형의 해소와 지역·계층·성·세대간 형평성 증진에 노력함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2003년)하여 지방분권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도록 하였음

□ 중앙집권·집중 시대에서 지방분권·분산 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 지역균형 발전을 주요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여 추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최초였음

□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 발전과 분산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립 등을 추진하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반발과 합의 부족 등으로 인해 미해결 과제로 남음

○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추진으로 전환되었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 대립과 불안정이 상존하는 21세기 동북아 지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임

○ 일관된 평화 번영정책의 추진,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 도모

○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이라는 3대 정책분야의 선순환관계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 추구

□ 평화번영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

○ 북한의 핵보유 선언, 6자회담 무기한 중단, 핵실험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3 합의 등 소정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균형적 실용외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과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 글로벌 차원의 협력 외교 추진 등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한미 동맹 재조정과 한미 FTA 타결을 통해 한미관계의 발전을 추구했음 (국정홍보처, 2008)

○ 미국 외에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외교를 추구하였음

국회입법조사처 www.nars.go.kr

<참고문헌>

강혜경, 1999,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민족주의 담론』, 統一論叢 17('99.12).

공보처, 1992,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대통령정부 5년』, 공보처

국무총리행정조정실, 1993, 『제6공화국정부 5년 노태우대통령공약실천』,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국정홍보처, 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 2002, 『국민의정부 5년 국정자료집』, 국정홍보처.

유석렬, 1989, "북방외교의 현황과 추진방향", 한국정치학회편, 『민족공동체와 국가발전』

이명수, 2007, "IMF외환위기 전후의 국가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44집

이영탁, 2000, 『평가지표를 통한 역대 대통령의 업적 평가: 취임사에 나타난 공약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서울).

장현규, 2004, "민주화 10년의 정치·경제 분석 시론: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4권 제2호

전재성, 2002,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변화과정 분석", 국제문제연구 제2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6

국정아젠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정한 사회' 정책현황 및 과제

발간일 2010년 10월 21일

편 집 국회의원 권택기

발행인 국회의원 권택기

발행처 국회의원 권택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412호

TEL (02)784-2161 FAX (02)788-3412

1. 이 자료집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자료집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 권택기의원실(TEL 784-2161,788-220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